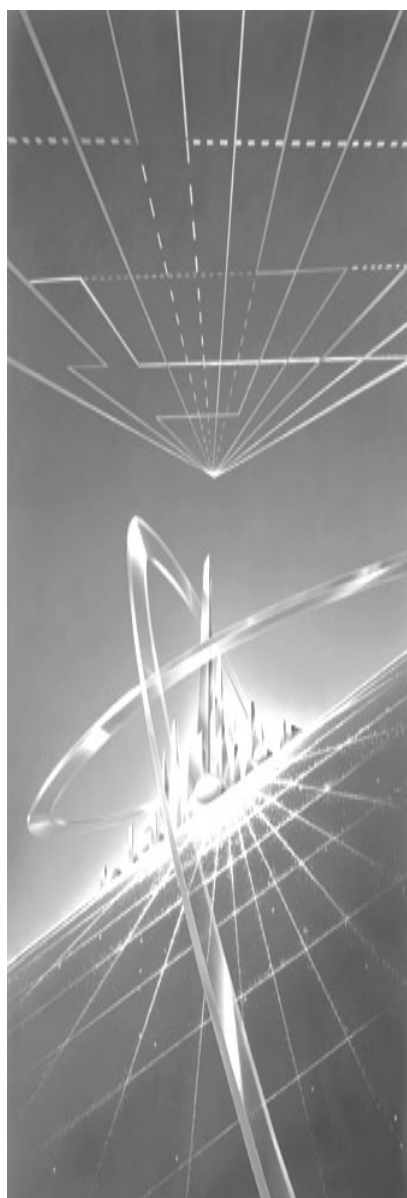




건설동향브리핑



제 98 호 (2005. 10. 1)

- 경제 : 2006년 전체 예산(안)과 SOC 분야 전망
건설 취업자 추이
- 정책 : 「지방계약법」 하위 법규 윤곽 드러나
- 이슈 :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향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 추진 방안
- 정보 : 최근 건설업체 인력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 논단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필요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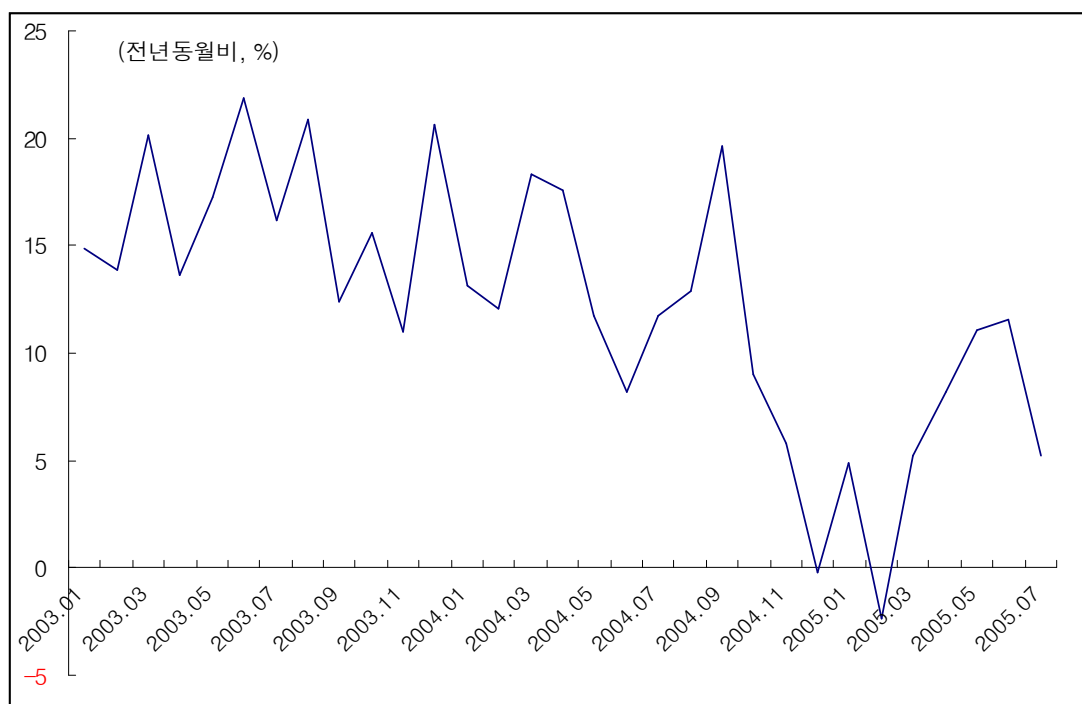
■ 3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 건설업 등록업자만 가능

오는 2006년 초부터 3층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업자만 지을 수 있다. 또한, 학교나 학원 등 다중 이용 건축물 신축은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설업자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최인기, 한선교, 정갑윤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로 제출한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00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무등록 업자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하자 발생 등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 및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건설 기성액 추이

- 7월 건설 기성액은 6조 1,5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비 5.3% 증가함.
- 건설 기성액은 2003년 이후 2004년 3분기까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 4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2005년 6월 11%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7월에는 다시 감소함.

건설기성액 전년동월비 추이



2006년 전체 예산(안)과 SOC 분야 전망

- 전체 예산 전년 대비 6.5% 증가 -

■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동시 추구

-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06년도 총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 보다 6.5% 늘어난 221조 4,000억원 수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지원할 계획
 - 총지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8.3% 늘어난 115조 5,000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 9,000억원 수준으로 4.7% 증액
 - 총수입은 주세율과 LNG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 8,000억원과 공기업 주식매각분 1조 5,000억원 등을 감안, 5.9% 증가한 235조 6,000억원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3%(2.2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11.7조원) 적자 예상
 -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추경 후 9.8조원)보다 다소 낮은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국채 비율도 올해 7.2%에서 6.2%로 낮아지게 됨.
 - 국가채무는 금년 말 248조 1,000억원 수준에서 279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0.4%에서 31.9%로 높아짐.

■ 수송·교통·수자원 분야 예산 감소

- 2006년도 분야별 예산을 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연구개발) 분야 투자(15.0%)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보건예산(10.8%)도 크게 증가함.
 - 국방_일반회계(9.8%),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13.8%), 국가균형발전 분야(8.4%), 문화·관광(9.8%) 등의 증가가 큰 반면 수송·교통·수자원 분야는 2.7% 감소함.
- 사업별로는 각 분야에 걸쳐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남.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72.0%), 육아지원 사업(42.5%),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156.0%)을 증액함.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14.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24.0%),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54.2%)을 확대함.
- 교육 분야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12.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33.2%), 학자금 지원사업(40.3%)에 증액 지원함.

■ 향후 SOC 분야, 민간투자 활용 지속 확대 전망

- 2006년 SOC 분야는 재정투자를 줄이는 대신 민간역할을 강화하여 건설-임대방식(BTL)의 민자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내년도 BTL사업은 8조 3,14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남.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전라선 복선화 등 시설확충이 시급한 생활기반시설은 조기에 확충하기로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년)에서도 SOC 분야는 건설-임대방식(BTL)의 민자유치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R&D(연구개발), 교육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유가, 저출산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둠.
-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단순 도급형 공공공사를 탈피해 기획개발형 사업추진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기획·재원조달 능력 강화, 컨설팅업계 및 재무적 투자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2006년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안)	증감률	비 고
도 로	77,071	74,075	-3.9	도로부문 투자속도 조절
철 도	36,619	32,346	-11.7	철도수요 등을 감안 투자규모 조정
도시 철도	12,366	12,953	4.7	부채상환 등 운영지원(3,024→5,370억원)
해운·항만	18,555	18,855	1.6	부산신항·광양항 개발(7,217→7,423억원)
항공·공항	4,458	4,348	-2.5	인천공항 2단계(2,273→3,011억원)
물류 등	6,255	9,397	50.2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1,150→2,307억원)
지역 개발	27,242	25,626	-5.9	수자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	182,566	177,600	-2.7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주 택	116,821	121,456	4.0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B T L	61,969	83,147	34.2	노후 하수관거, 학교 개축 및 신축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건설 취업자 추이

- 건설업 취업자 수 4개월째 증가세 -

■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비 46만 5,000명 증가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8월 취업자 수는 2,284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5,000명(2.1%) 증가함.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농림어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 182만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3.9% 증가하여 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이후 5개월 동안 전년 동월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올해 5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가 지속됨.
- 제조업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건설업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2.5시간 감소하여 근로시간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올 상반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던 건설 기성액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며 취업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단위 : 천명, 시간, %)

취업자 수 및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천명, 시간, %)

구 분		2004. 8.	2005. 7.	2005. 8.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수	전 체	22,382	23,184	22,847	465	2.1	-338	-1.5
	건 설 업	1,751	1,870	1,820	69	3.9	-51	-2.7
	남	1,595	1,719	1,664	69	4.3	-55	-3.2
	여	156	152	156	0	0.1	5	3.0
	제 조 업	4,226	4,223	4,167	-59	-1.4	-65	-1.5
근로 시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	47.7	48.7	45.8	-1.9	-	-2.9	-
	건 설 업	49.3	49.8	46.8	-2.5	-	-3.0	-
	제 조 업	44.2	45.8	44.1	-0.1	-	-1.7	-

자료 : 통계청.

강민석(책임연구원·mskang@cerik.re.kr)

「지방계약법」 하위 법규 윤곽 드러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행자부는 「지방계약법」이 제정·공포(2005. 8. 4)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2005. 9. 13일자로 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49호)하였음.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치단체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 대학 연구소,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을 명시함.
-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에 따른 시행절차 마련(안 제31조)
 - 지자체의 2003년도 현재 수의계약 비중(69%)이 높아 부패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등을 체결 후 익월 10일 이내 해당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 행자부가 공사기술용역·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자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자부의 미지정 시·도지사가 그 시·도 및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할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57조)
 - 주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지방 발주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은 해당지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효용성이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동·리장,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당해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건설기술 관련 단

체의 임·직원 등 국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체화함.

- 공사의 단가계약 체결 근거(안 제78조) 마련
 - 단가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시설물의 보수·복구’를 명시함으로써 긴급한 복구·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절차범위 등 설정(안 제82조)
 - 통상적인 확정계약 방식은 사전이행절차에 최소 25~70일까지 소요되는 등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적지 않아 개선책으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 적용대상을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피해복구 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작성된 경우 시공이 공정별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자에 대한 자료조사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3조)
 - 지자체 장, 지방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또는 조회 요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체결 제한대상자의 자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110조)
 - 심의대상을 국제입찰 외에도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등은 6억원, 용역·물품 3.3억원) 이상의 국내입찰도 포함시킴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수해 등 긴급 복구·보수 공사의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 접근성을 고려한 시공자 선정에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함(안 제27조).
-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 수해복구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수의계약 대상을 응급복구 공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구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으로 한정함.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향

■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요

• WTO 정부조달협정의 대상 여부

- 일본의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WTO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공사는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되고, 그 이외에는 지명경쟁입찰이 사용되고 있음.
- 일반경쟁입찰은 표준형과 시공계획심사형으로 나뉘는데, 시공계획심사형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대하여 입찰 예상자에게 시공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기술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전심의제도이지만 사례가 적음.

• 입찰제도의 개요

- 일반경쟁입찰, 공모형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세 가지로 나뉨.

입찰방식명	개시년도 및 공사규모	입찰까지의 과정
일반 경쟁입찰	1994년, 국토교통성의 경우 7.5억엔 이상의 공사 (성청=부처마다 다소 다름)	1. 공고 2. 업자가 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 3. 경쟁참가 자격확인 4. 입찰
공모형 지명경쟁입찰	1994년,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의 경우 2억부터 7.5억엔까지의 공사 (성청마다 다소 다름)	1. 기술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게시 2. 업자가 기술 자료를 제출 3. 기술자료의 심사 및 지명통지 4. 입찰
지명경쟁입찰	국토교통성 직할의 경우 1억엔 이하의 공사	1. 유자격자 등록 2. 지명업자통지 3. 입찰

■ 입·낙찰 방식의 다양화 추구

• 일반경쟁입찰의 다양화

- 통상형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을 공시하여 참가자격이 있는 수주 희망자 전원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경쟁입찰방식임.
- 조건부 일반경쟁입찰 : 경영심사, 등급, 지역,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확인되어 확산 중에 있음.

• 지명경쟁입찰의 다양화

- 통상형 지명경쟁입찰 : 발주기관의 선정위원회가 복수의 업자를 지명하여 경쟁시킴.
- 공모형 지명경쟁입찰 : 입찰참가의사를 가진 자를 사전에 공모하여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를 복수 지명하여 경쟁시킴.

- 공사회망형 지명경쟁입찰 : 사업자는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공사의 유형에 대해 발주기관에 등록하며, 발주기관은 해당사업의 발주시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기술제안을 요청하여 심사 후 최종 지명하여 경쟁시킴.
- 상세조건 심사형 입찰 : 실적 외에 특수 조건 등을 부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격이 되는 입찰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10개 사 정도를 지명함.
- 추첨 입찰 : 후보자를 입찰 당일 추첨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담합방지가 목적임.
- 협상 방식 : 기술력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가격 협상을 실시하거나, 가격이 낮은 자부터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선정하는 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의 다양화

- 일반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평가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낙찰자 결정방식	적용방법
가격경쟁방식(종래방식)	기본적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업자를 낙찰자로 정함
종합평가방식(1998년부터 국토교통성에서 실시 중)	가격과 함께 가격 이외의 조건(예를 들어, 공기, 안전성 등)도 경쟁요소로 하고,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한 업자를 낙찰

- 기술제안형,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국내의 턴키제도)이 점차 확산 중에 있음.

기술제안 방법	적용하는 공사
입찰시 VE 방식	기술의 진전이 현저한 공사나, 민간이 시공방법 등에 고유의 기술을 가지는 공사
계약 후 VE 방식	입찰시 VE 방식 대상 중, 시공단계에서 현장에 적절한 코스트 감축에 기여되는 기술제안이 기대되는 것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특수한 시설 등에서, 설계기술이 시공기술과 일체가 되어 개발된 것 등의 이유로, 업자가 가진 특별한 기술이 활용 가능한 공사

■ 주요 시사점

- 일본은 명치시대 이후 계속 사용되어 온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단점이 급속히 부각된 점과 WTO 대응이라는 국제적 요구로 인해 최근 들어 입·낙찰제도를 다양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00년 제정된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은 투명성 확보, 공정 경쟁의 촉진, 적정한 공사비의 확보, 부정행위 배제를 목표로 함.
-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요소를 가격 외의 요소로 확대한 점, 민간 기술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촉진, 과도 경쟁 및 담합의 방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송병관(책임연구원·kwanii@cerik.re.kr)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 추진 방안

■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의 의미와 건설현장에서의 절실한 필요성

-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업장 성립 및 소멸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각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납부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한다는 의미임.
- 4대 사회보험의 유사한 중복업무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임. 하지만 정규근로자의 경우 이동이 드물어 중복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징수 일원화 논의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국가적 비용의 절감 차원임.

※ 정규근로자에 대한 일원화 논의 ⇒ ‘편의성 제고’ 차원

-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심각성의 차원이 다름. ‘잡은 이동’이라는 특성과 맞물리면 서 업무의 양을 엄청나게 증폭시켜 사업주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짐.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원화 논의 ⇒ ‘사회보험 성패’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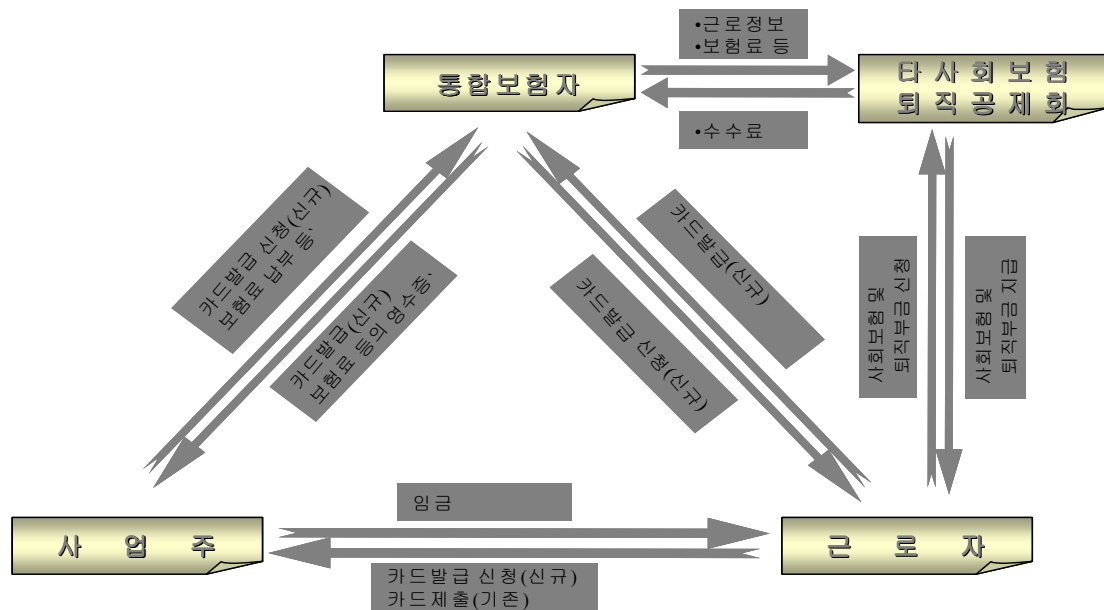
- 따라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함. 이때 건설일용 근로자의 특성이 반영된 적용·징수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 부적합, 사회보험마다 상이, 유사업무 중복 수행

주요 항목	관련 사회보험	현행 규정	현황 및 문제점
관리 단위	고용보험	·건설현장별 관리	·동일사업주의 현장 간 신고행위 빈번
보험가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급사업의 원수급인	·원수급인의 피보험자 관리에 한계 ·근로자 보호에 소홀
사용자 개념	국민연금, 산재보험	·십장 인정 여부 모호	·십장의 관리 능력 부재 ·피보험자 관리 곤란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의 서면신고 중심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또는 익월 15일까지 신고	·빈번한 신고에 부적합 ·피보험자 누락 불가피 ·누락 인지 이후에 정정 곤란
보험료 부과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무비율 적용 (원수급인 28%, 하수급인 33%)	·공종별 규모별 노무비율 차이 무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위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년도 임금 기준	·시기별 보험료 부담능력 위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제 지불임금과 부과기준간의 불일치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개 보험의 정산의 불편 야기
납부 방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 납부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다 징수에 따른 반발 야기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납 및 선납	·정산의 불편함 초래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와 적용·징수 업무 일원화 추진

- 그림에서 보듯이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에 적합한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 처리함.
- 사업주는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련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각각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징수자에게 전달하면 통합징수자가 나머지 사회보험자에게 정보와 보험료를 전달하는 방식임.



■ 건설현장에 적합한 방식 : 실제 지불임금에 기초한 월납, 후납, 자진납부 추진

주요 항목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비고(독일 사례)
관리 단위	·기업단위로 전환, 현장단위 관리번호 보완 ⇒ 잦은 이동 포괄	·보험료의 누락 가능성 ⇒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강화	·기업단위
보험 가입자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사업주 ⇒ 피보험자 관리 효율성 제고	·영세 전문건설업자의 행정력 부족 ⇒ 전자카드 도입, 일원화 시행 등	·합법적 건설업자
사용자 개념	·합법적인 건설업자로 국한 ⇒ 십장의 사용자 지위 박탈	·십장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논란 존재 ⇒ 개별법 규정으로 대응	·합법적 건설업자
피보험자 관리	·전자카드 도입 및 연계 ⇒ 사업주/보험자의 편의성 제고	·과중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 연금 등 관련 당사자의 각출	·일용근로자 적음
보험료 부과기준	·실제 지불임금 기준 ⇒ 보험료 부담능력 원칙 견지	·피보험자 관리 부진시 보험료 누락 ⇒ 산재보험의 경우 검토 필요	·실제 지불임금 기준
	·당월 소득 기준 ⇒ 보험료 부담능력 원칙 견지	·임금변동이 잦을 경우 혼란 초래 ⇒ 오히려 적시성 및 부담능력 존중	·당월 소득 기준
	·실제 지불임금과 부과기준 일치 ⇒ 정산의 불편함 제거	·상동	·정산 불필요
납부방식	·자진납부 ⇒ 잦은 이동 및 소득 변동에 적합	·사업주의 불편 ⇒ 적용징수 일원화 ·허위신고 우려 ⇒ 감독 체계 강화	·적용/징수 일원화 ·감독 체계 보유
	·월납 및 후납 ⇒ 정산의 불편함 해소	·매월 신고시 사업주와 보험자의 업무 증가 ⇒ 매월 사업장 총액 신고	·매월 사업장 임금총액만 신고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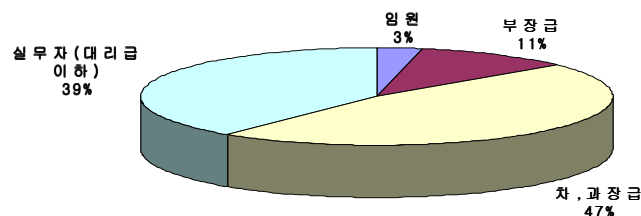
최근 건설업체 인력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음.
- 지난 2005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산업별 평균연령을 보면 1994년에 비해 2003년 사이에 철강(39.7세), 조선(38.6세), 자동차(36.2세)의 경우, 2.1~3.3세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전통 제조업의 경우에는 5.2~5.8세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경우,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지만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가 지난 3월에 1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연령이 40.8세를 나타내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연령의 취업자를 가진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건설기업의 경쟁요소 핵심이 인적자원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력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서 인력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체 인력구조의 현황

-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고령화 특히, 고직급화의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조사대상 13개 업체의 임원비중은 전체의 3.0%, 부장급이 10.8%, 차, 과장급이 47.0%로서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전체 인력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사대상 13개 건설업체 인력구조현황



- 이러한 성향은 대형기업(시공능력평가액 30위 이내)일수록 더욱 고직급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견기업 이하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리급 이하 실무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연령면에서는 임원과 부장급이 각각 52.8세, 48.7세, 차장급 43.9세, 과장급 37.8세, 대리급이 33.8로 나타나고 있는바, 직급간의 평균 연령차이가 4.9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업의 승진년한 체계상의 업계평균 4.3년¹⁾임을 감안하면, 승진제도 운영상의 적체도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설기업 인력 구조 변화의 문제점

-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향후 기업성장의 잠재역량 저하를 들 수 있음.
 - 최근 건설기업들은 건설시장 개방 요구 증대 및 건설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건설기업의 성장의 기반인 인력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 특히, 고령화와 고직급화의 진전은 현재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건설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건설업이 기술산업임을 감안할 때 인력들이 가진 각종 기술과 지식, 정보가 지속적으로 조직 내에 경쟁력으로 쌓이도록 하여야 하는바, 급격한 고직급화, 고령화는 인력이 가진 기술과 정보를 지식화하는 데 있어 장애를 줄 것임.
- 다음으로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점임.
 - 최근의 건설경영환경은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시장 내에서의 경쟁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
 -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신상품 및 신시장 개척이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러한 기업 내의 전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조직 및 인력의 유연성 제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고직급화의 경향은 전략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하며,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의 헌신 및 동기부여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이는 조직의 유연한 변화대처 능력을 저해할 것임.
 - 또한 건설산업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편으로 고령화, 고직급화가 지속되면 임금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는 경영상의 애로를 발생시킴.

1) 2004년 10월 발간된 건설업체인사관리협의회 자료집에서 참조한 것으로 부장까지의 승진 평균년한임.

■ 건설기업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제언

- 건설기업이 이러한 고직급화와 고령화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인력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
- 첫째로는 고직급 및 고령인력의 잠재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의 자원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고직급 및 고령인력이 가진 잠재적인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기업 내의 경쟁력으로 이끌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내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을 학습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기술 및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관리의 시스템 및 정보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로는 조직내부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인력 활용의 다양화임.
 - 고직급화와 고령화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반면 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단순히 특정분야의 특정인력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조직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즉, 적절한 인력배치 및 원활한 직무 이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함.
 - 점진적으로 인력관리의 관점부터 사람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조직관리 차원의 인사관리로 전환해야 하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단위의 임시적인 조직편제의 적극적인 활용, 직급구조의 단순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함.
- 셋째로는 조직 내의 문화적인 요소의 변화를 꾀하는 일임.
 - 고직급화와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조직문화적인 발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바, 조직 혁신에 대한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함.
 - 임직원 상호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유, 경영전략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 조직 목표에 대한 상·하 직원간의 협동적 자세, 회사와 단위조직 간 목표의 일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함.
-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가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산업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나 건설업체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인력구조의 변화에 대응, 적절한 인력과 조직관리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김영덕(기획팀장·ydkim@cerik.re.kr)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필요

8.31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하고 있고, 이는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데 기여해 온 건설 경기의 경착륙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수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동인이 부재한 현재의 상황은 금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전망마저 어둡게 만들고 있다.

최근 당정은 내년도 정부 지출과 금년 하반기의 추경 예산에 합의하였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원이고, 금년 하반기의 추경 예산은 5조 1,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4조 1,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금년 하반기의 추경 예산과 내년도 정부 지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금년 하반기의 추경 예산은 경기 부양의 목적이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즉,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가 채무로 충당하는 한편, 세수 부족을 야기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실물부문보다는 복지부문에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의 국면에서 탈피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을 견인할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 재원의 마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구축과 복지 수준의 개선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SOC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과 투자 유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의 증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SOC 투자는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 예산의 집행 대상을 복지부문에서 경기 부양 목적의 SOC 투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10월 중 연구원 주요행사

- 추계 체련행사 개최(10월 7일(금),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제 3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회의(10월 10일(월),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 3개 작업반(입찰제도반, 동반성장반, 구조조정반) 최종보고서 검토 및 2차 작업반 운영방향 논의
- 2005년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0월 13일(목), 아세아도원(중식당))
 - 2006년 연구원 연구과제 검토 및 연구원 발전방향 논의
- 텍사스 오스틴대학 ‘김슨’교수 초청 강연회(10월 14일(금),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 강의주제 : 미국 발주방식의 새로운 트렌드

■ 2006년 원외 연구과제 제안 실시

- 연구원은 2005. 9. 16일부터 10. 5일까지 2006년도 기본과제 편성을 위한 원외 연구과제 제안을 실시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팀(02-3441-0815~6)으로 문의

■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조찬회 개최

-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조찬회가 10월 12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에서 개최됨.